

민주, 특검법 공세 가속... 주말 시민단체와 연대 장외집회

'김건희 특검' 14일 본회의 상정...서명운동도 동시 진행 탄핵 별개 '심판연대' 기조...尹 거부권 행사시 2차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5일 기자들을 만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개별 의원들이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한 사례는 있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함께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단계와 연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당초 대선에서 권역별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측에서 함께 집회를 열 자고 제안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집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와 별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참여하는 집회는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연대' 성격일 뿐 탄핵을 하지는 집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민주당의 기조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현장에서 탄핵이나 퇴진 구호를 외치지 않는 데 동의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퇴진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 민주당 집회에 비해 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형태의 공동 집회가 되풀이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외치는 단체들과도 연대가 이뤄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당도 '탄핵 촛불집회' 흐름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특검법 본회의의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2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능성에 배치해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된 후에 곧바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른 여론 기류 변화, 여야 대표회담 성사 여부 등 정국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와 방식 등은 조정될 여지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명태균 의혹·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등 추가...국힘 반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의 주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횡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적으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동훈 "尹 담화, 반드시 국민 눈높이 맞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 "똥맞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일정이 발표되기 전 대통령실에서 사전 연락을 받았는데 대해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 중심에는 추 원내대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만약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개최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3대 2로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2대 3에 가깝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의견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 될까

국힘, 중앙지법에 요청 탄원서...박근혜, 사흘 전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오후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

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

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위		모집 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길 36